

# 전주매일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음 7월 23일)
 제16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오늘은 민방위의 날"

24일 제40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도청 구내식당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민방공 대피훈련을 가졌다.

##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도민들 울렸던 전기료 누진세 폭탄도 모자라

## 이번엔 주민세 5배로 '껑충'

정부 '안하는 지자체에 패널티 부과'인상 권고에 너도나도 금액 올려 주민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낭비되는 예산 유무 지켜보는 것이 우선"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전기료 누 진세 폭탄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전 북도민의 열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5배 오른 주 민세 폭탄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는 2016년도 균등분 주민 세 79만8,000건을 이달 말 납기로 부과 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해서 걷는 데,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 과하는 세금이다.

유형별로는 개인(세대주)분 주민세가 70억원, 개인사업자 25억원, 법인분

21억 원 등 모두 11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72억원)보다 44억원

(61.1%) 늘어난 금액이다. 바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바로 개인균등문 수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상 때문이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개인판등군은 1만원까지 사이단제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0원이나 3,000 원인 곳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세 인상을 권고하고,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패널티를 주면서 전 국적으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진 행된 일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률 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무주의 경우 지난해 주민세는 2,000원이었지만 올해 1만원으로 5배 가 오라다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주군 주민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1만1,000원이다.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3,000원이던 김 제·군산·익산시, 장수군도 올해 일 괄 1만원으로 인상했다.

순창과 고창은 3,600원에서, 완주와 전주는 4,000원에서, 남원은 7,000원에 서 각각 최고액인 1만원으로 껑충 뛰 어다

2014년에는 주민세 최고액이 정읍

9,000원으로 1만원인 지역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15년 임실 1곳에서 올 해에는 11곳으로 1만원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쉬운 상황이 돼버렸다.

도내에서 1만원이 넘지 않은 지역은 진안(7,000원), 정읍(9,000원), 부안 (8,000원)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지역 중 진안(3,000원) 과 부안(5,000원)도 각각 4,000원, 3,000원 오른 금액이며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자체들이 애매한 명분을 내 걸고 담합 수준의 주민세 인상을 앞다 퉈 실행함에 따라 서민 부담만 가중되 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효자동 박모씨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낭비되는 예산 유무를 세심하 게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국민의 고혈로 채우고 있 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마른장마' '폭염' 때문에…

## 도, 가뭄대책상황실 운영

전북도가 가뭄대책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

이는 장마기간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기동한 rl

최근 두달간 도내 강수량인 평년 대비 6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저수 지 저수율이 54.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 주 중 가뭄위기경 보 중 '주의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

다행히 모내기 이후 논에 추가로 물을 공급하는 본답급수가 완료되는 다음달 20일까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지만, 수리시설 이 구축되지 않은 농경지에서는 가 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 하고,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 조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 록 가뭄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근무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가뭄현황 모니터링 및 가뭄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가뭄대비를 위한 국가예산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종 가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 투표자 연령 18세로 낮춘다

### 선관위, 정당후원회제도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선 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 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정권 확대, 지구당 부활을 위한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공 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우선 현행 19세인 선거권 연령하한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 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 한이 19세이다. 세계 147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의 신뢰보호 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기 로 했다.

이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하기 위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 조직의 경우 중앙선관 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후 선거운동비용 회계보 고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 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 ▲지구당 및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선관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구·시·군 당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당에 후원회를 두되, 시·도 및 자치구·시·군마다 후원회 연락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의 모금이 가능하다.

